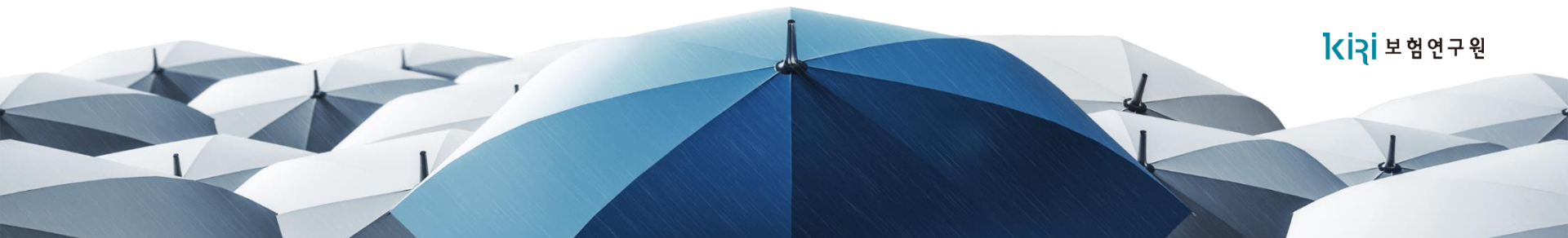




공·사적 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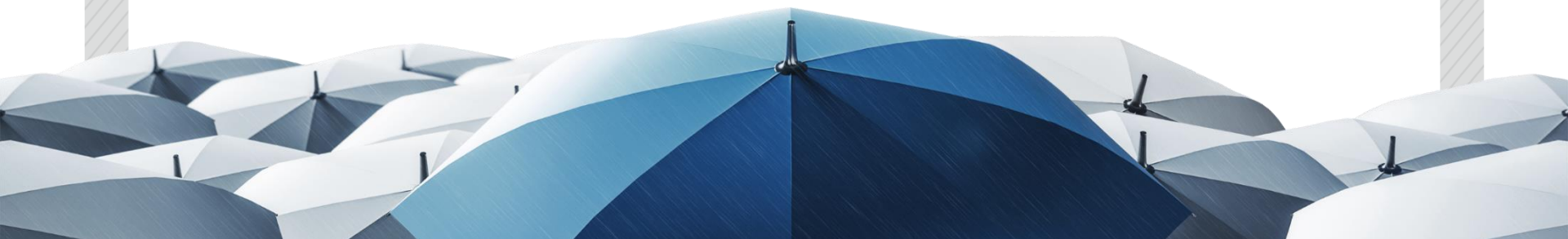
김 동 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23. 11. 3.



목 차

- I. 공적연금 개혁논의
- II. 해외의 경험과 대응사례
- III. 국내 사적연금제도 진단
- IV. 주요 과제



I

공적연금 개혁 논의

1.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과 배경

- 주요 내용
- 연금개혁의 배경

2. 연금개혁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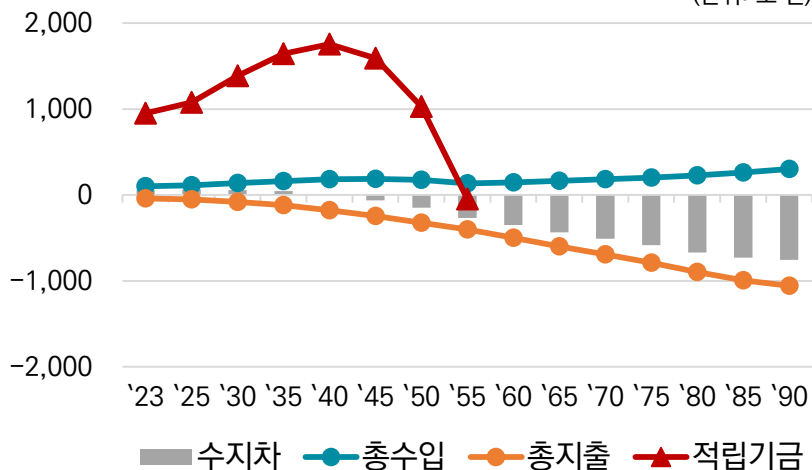
- 제도지속 가능성
- 노후소득 공백, 소득불평등

1-1. 연금개혁(안): ①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측
- 연금개혁안의 정책목표: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적립기금 소진 방지 등 '재정안정화')
- 정책수단: ① 보험요율 인상, ② 지급개시연령 연장, ③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공적연금 재정전망 (5차 재정계산)

(단위: 조 원)



공적연금제도 개혁안

I. 재정안정화 방안

재정
수입

보험요율 상향

투자수익률 개선

지출

지급개시연령 연장

II. 노후소득보장 방안

급여제도 개선

가입제도 개선

기초·퇴직연금 역할 검토

주: 국민연금 지출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함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자료: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2023.9.1.)

1-2. 연금개혁(안): ②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2023.10.27)
 - 재정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하고,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경우 사회적 논의 시작을 위한 개혁방향만을 제시함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② 세대형평 국민신뢰 제고

- 지급보장 명문화
- 출산 및 군 크레딧 제도
확대
-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③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보험요율** 인상*
*연령그룹에 따른 차등
- 계속 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 국고지원 확대

④ 기금운용 개선

- 기금수익률 제고
-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 자산배분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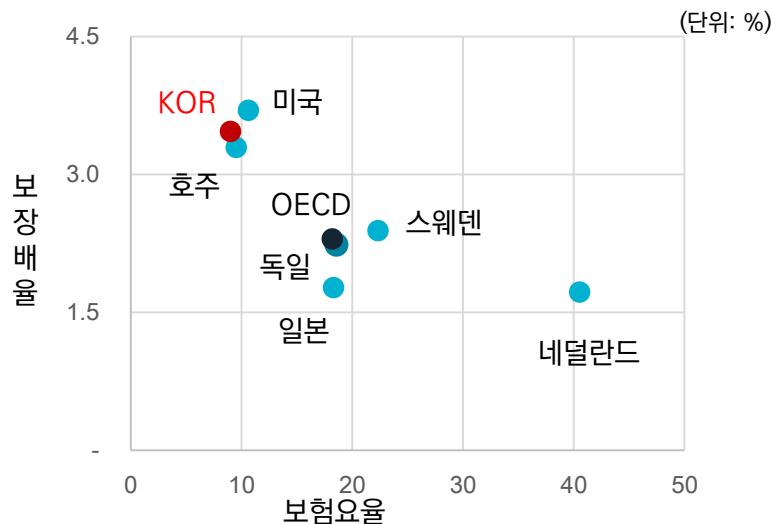
⑤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1-3. 연금개혁 배경: (1) 구조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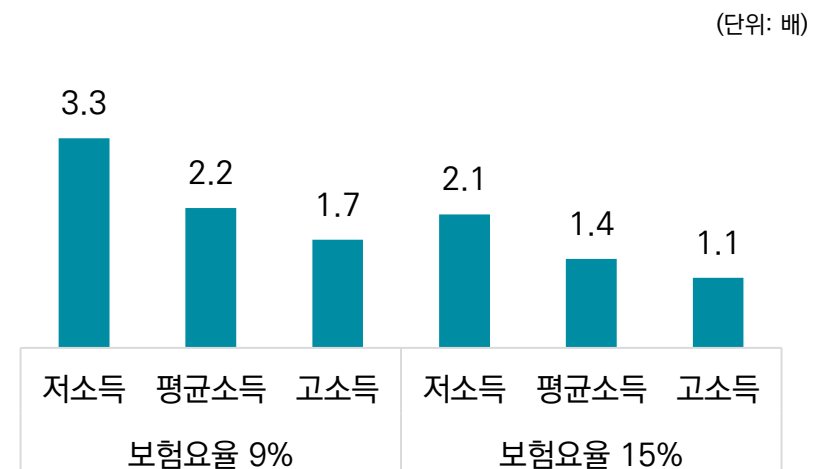
- 관대한 연금제도(저부담·고급여 구조) 운영에 따른 적립금 소진 가능성 증대
 - 보험요율은 OECD국가의 절반 수준(9.0%)이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2.3)을 상회하는 3.3 배
 - 소득계층별로 수익비(납부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 차 존재: 소득재분배 기능

보험요율 vs. 보장배율



주: 보장배율 = 소득대체율/보험요율
자료: OECD(2021), Pensions at a Glance

국민연금의 소득계층 별 수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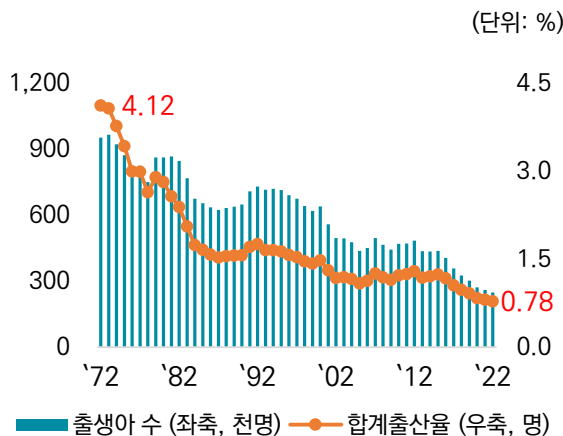


주: 2023년 신규가입자 40년 가입 25년 수급 가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1-4. 연금개혁 배경: (2) 사회·경제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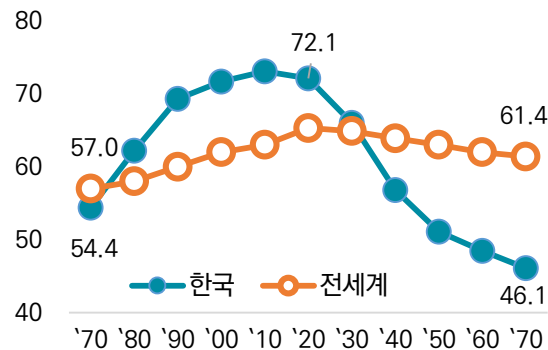
-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지표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적립금 소진 가능성 증대
 - 초저출산 현상과 향후 인구구조 변화 →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
 - 경제지표 악화: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금리 등

초저출산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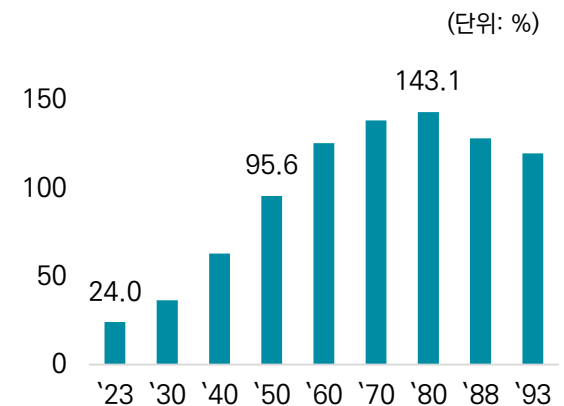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 전망



주: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임
 자료: 통계청(2022),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주: 제도부양비 = 노령연금 수급자 수 / 가입자 수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2-1. 제도 지속가능성

• 재정안정화 방안의 조합에 따라 장기 재정균형 달성 가능

- 재정안정화 수단: ① 보험요율, ② 지급개시연령, ③ 기금투자수익률

- 보험요율 15%, 지급연령 68세, 투자수익률 1%pt. 상향 시 기금소진시점은 2093년으로 예상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재정수지 전망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03	1차	2036	2047
'08	2차	2044	2060
'13	3차	2044	2060
'18	4차	2042	2057
'23	5차	2041	2055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2023)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기금소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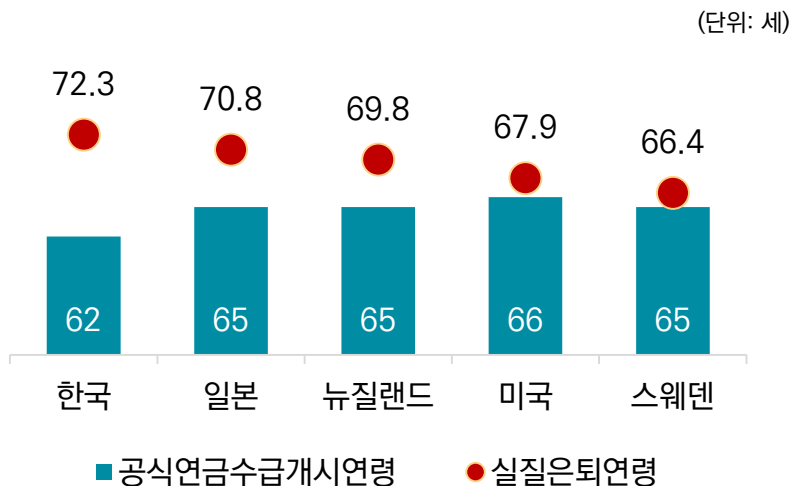
보험요율	지급개시연령	운용수익률	소진시기
12% (5년) 2063년	66세 2057년	+ 0.5% pt. 2057년	2066년
15% (10년) 2071년	67세 2058년	+ 1% pt. 2060년	...
18% (15년) 2082년	68세 2059년		2093년

2-2. 노후소득 공백 발생 가능성

- 연금개시연령 연장은 은퇴이후 부터 연금 개시시점까지의 노후소득보장 공백으로 이어짐
- 소득공백 발생 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조기노령연금을 수급
 -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은 72.3세로, 공식은퇴 시점 이후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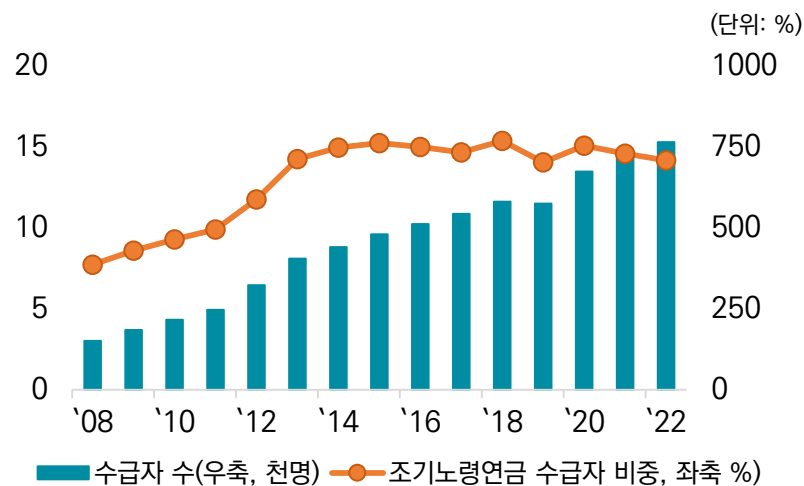
* 다만, 기초연금제도 도입(14년 7월)은 노후소득 보장에 일정 부분 기여

실질 은퇴연령 vs. 공식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료: OECD(2021)

조기노령연금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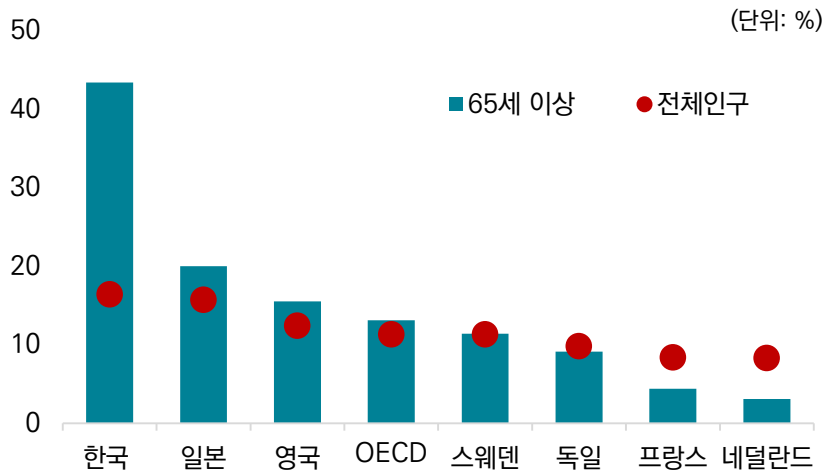


자료: 신경혜 외 (202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23~2027, 국민연금연구원

2-3. 소득불평등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
-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공적연금 개혁이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존재
 - **다만**,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고령의 지속적인 **근로활동 참여**와 **사적연금의 역할**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노후빈곤율 국제비교



주: 2018년 기준임
자료: OECD(2021)

연금개혁과 소득불평등도 간 관계

소득불평등 심화

vs.

무관한 관계 형성

연금급여 축소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개인의 저축여력 감소

연금개시연령 증가
사적연금 활용 증가
노동시장 참여 증대

Cribb and O'Brien
Staubli, Anderson

Goudswaard et al.
김도현(2023)

II

해외의 경험과 대응사례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계

1. 연금정책 변화 방향
2. 주요국 대응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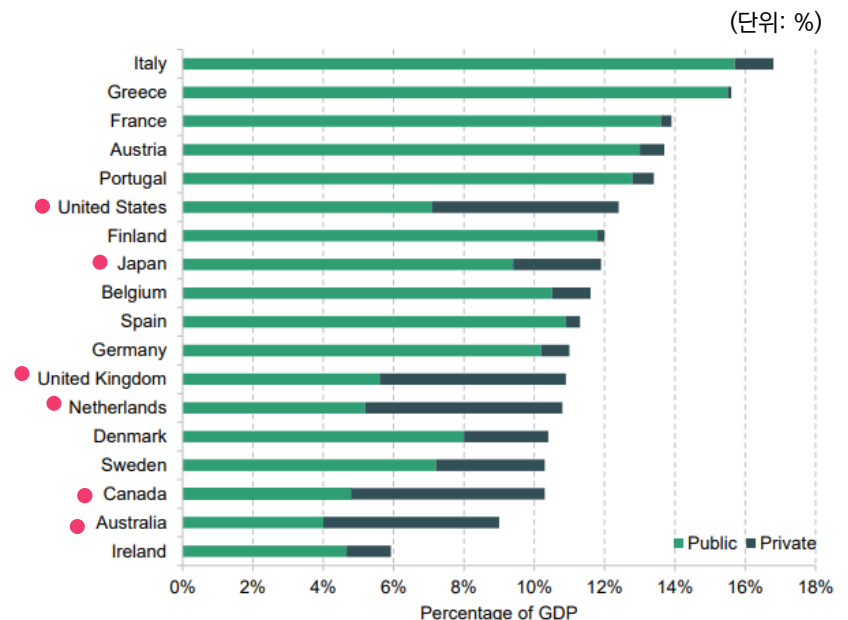
1-1. 주요국 공·사연금 연계체계

- 해외 주요국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
 - 고령화 진행 과정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정해 옴

해외 주요국의 공사연금 연계

사례	1층	2층	3층
일본	국민연금 (기초연금)	후생연금	기업연금, iDeco, 개인연금
독일	법정연금제도	기업연금	Riester, Rurup 개인연금
영국	신국가연금(nSP)	기업연금(NEST)	개인연금
스웨덴	공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캐나다	OAS, CPP, QPP	RPP, PRPP, DPSP	RRSP, TFSA

해외 주요국의 사적연금제도 활용도



주: 2017년 기준임
자료: IFS(2023); OECD(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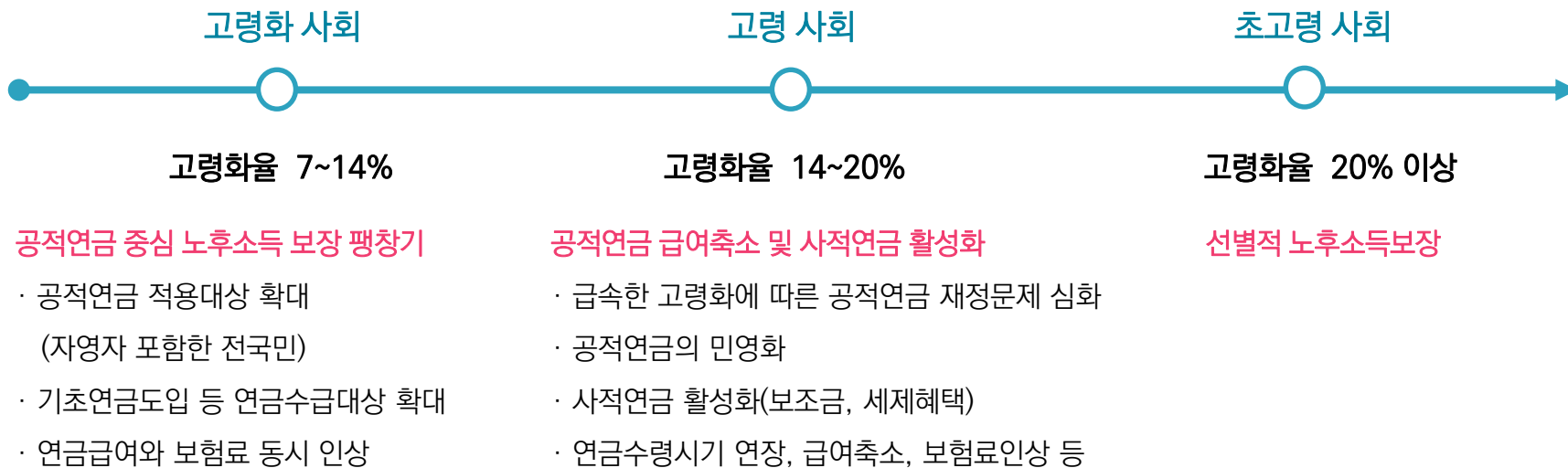
1-2. 연금정책 변화 특징

•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 고령화 진행 과정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추세

: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의 기능을 확대

고령화와 연금정책 변화



1-3. 주요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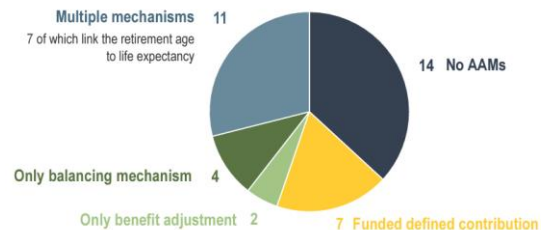
- OECD 주요국은 사회·정치·경제·인구통계학적 상황에 대응하여 연금개혁을 진행 중
 - 공적연금 급여수준 조정(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 근로유인 강화, 사적연금 역할 확대 등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공적연금 급여지급연령 조정



자료: OECD(2021)

연금급여 자동조절장치



- 기대수명 연계
 -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생산가능인구 규모 연계
 - 에스토니아, 그리스, 일본, 리투아니아

자료: OECD(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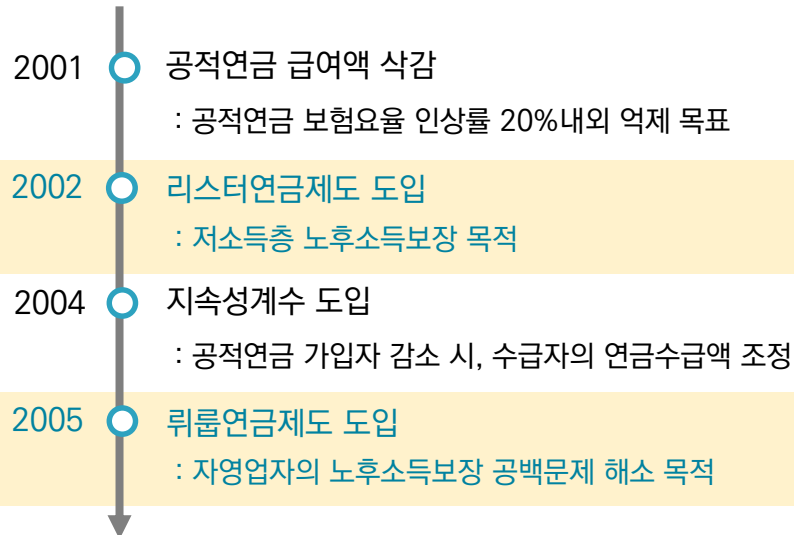
노동시장 및 사적연금 정책

- 노동시장 정책
 - 고령 근로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
 - 조기연금 수급요건 강화
 - 자발적 조기은퇴제도 혜택 축소
- 사적연금 역할 확대 정책
 - 자동가입제도 운영(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
 -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제도 운영 (소득계층, 연령별 차등 적용)

2-1. 독일: 연금개혁

- 독일은 공적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2000년대 초 두 차례의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
 - 2001년 공적연금 급여액 삭감, 2004년 지속성 계수 도입
-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빈곤문제 방지를 위해 정부인증 사적연금(리스터, 뢰름)제도 도입
 - 연금개혁 후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8.3%에서 3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Hain et al. 2004)

독일의 연금제도 개혁과 사적연금 활용



정부지원 사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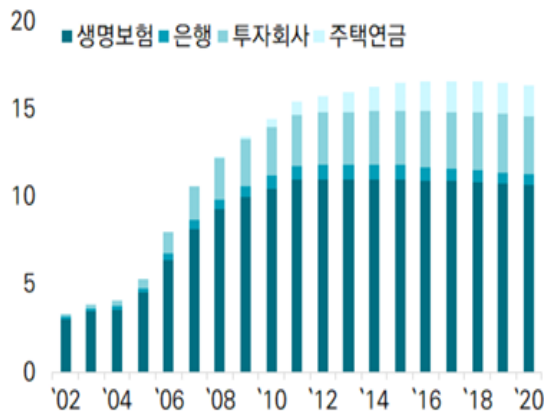
	리스터(Riester) 연금	뢰름(Rurup) 연금
가입대상	공적연금 가입자	과세소득자 (자영업자)
정부지원	보조금(본인 및 자녀) 세제혜택	세제혜택
공급자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보험회사
수급요건	최소62세, 종신연금 *일시금: 최대 30%	최소62세, 종신연금

2-1. 독일: 평가

- 사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사적연금 가입확대에 효과적으로 작용함
-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한계를 노출하며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임
 - 제도운영의 투명성,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입, 투자수익률,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 문제 제기
 - 가입 편의성 제고(보조금 계산 간소화), 수령방식 다양화, 상품비교정보 제공,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중

리스터연금 보유계약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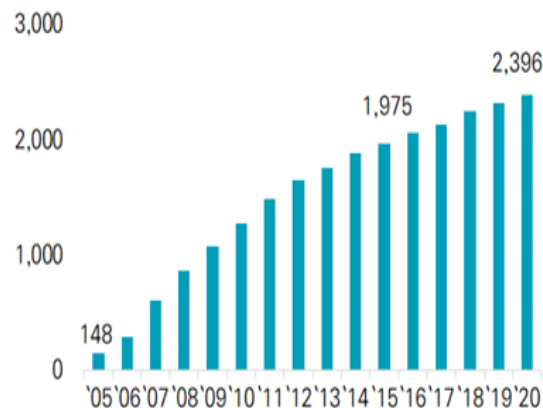
(단위: 백만 건)



자료: BMAS

뤼프연구 보유계약 건수

(단위: 천 건)



자료: GDV

리스터연금 가입지원 정책

보조금

기본보조금
최대 154 유로

자녀보조금
최대 300 유로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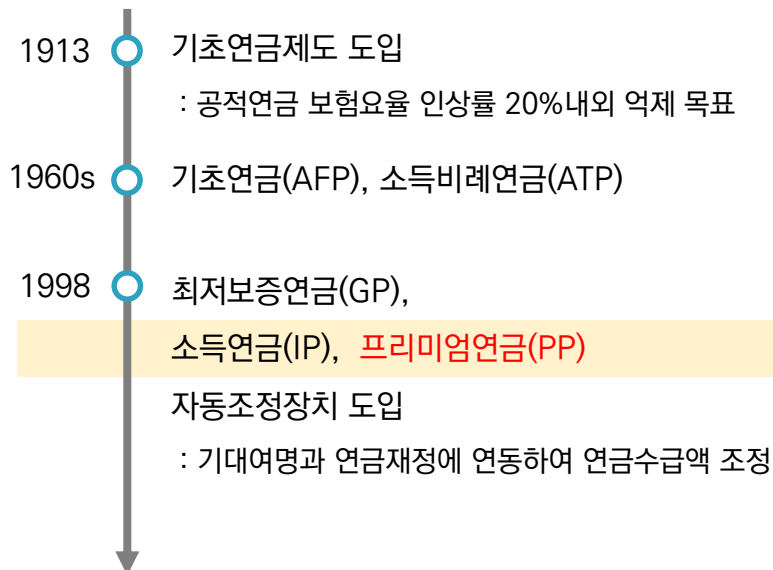
2,100 유로

자료: Better Finance(2021)

2-2. 스웨덴

- 1990년 대 이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재정불안 문제가 대두되며 연금개혁 논의 진행
-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모든 공적연금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제도를 도입
 - 프리미엄연금: 보험료의 2.5%를 적립하여 정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운영함
 - 기금운용자 변경은 가능하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스웨덴의 연금제도 변화



스웨덴 연금제도의 예상 소득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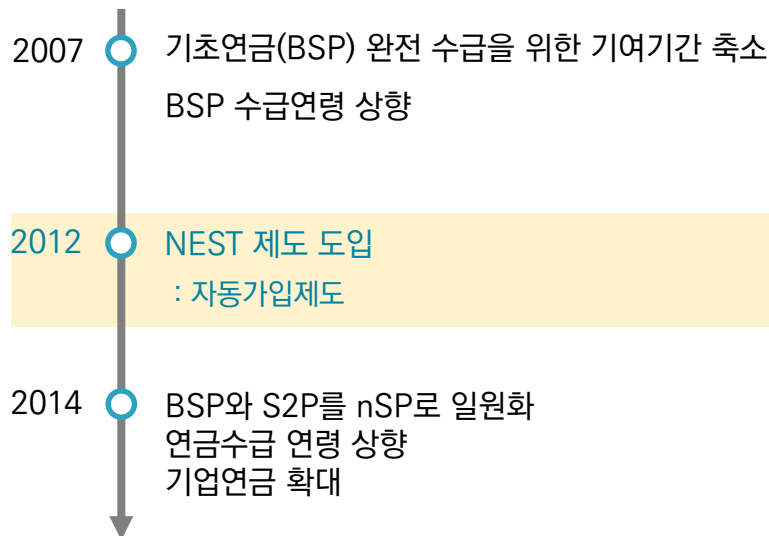
	소득연금 (IP)	총소득대체율 (공적+사적연금)
64세 은퇴	37%	48% ~ 58%
65세 은퇴	39%	51% ~ 61%
66세 은퇴	42%	53% ~ 65%
67세 은퇴	44%	57% ~ 69%

주: 투자수익률을 2~5%로 가정함
자료: Palmer

2-3. 영국

- 2000년 대 이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
-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를 병행
 -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2012년 4월 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치 시행
 -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NEST제도를 도입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재정수지 전망



NEST 제도에 대한 정부지원



Ⅲ

국내 사적연금제도 진단 : 노후소득보장 측면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2. 사적연금 시장 규모
3. 사적연금의 운영 상 한계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사적연금: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 퇴직연금, 적립형 IR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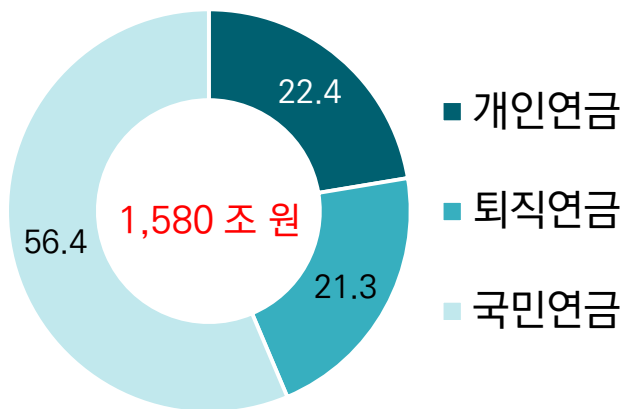


2. 사적연금 시장 규모

- 개인연금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소득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됨
 -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 소득세법상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 혜택 부여
 - 연금보험(세제비적격):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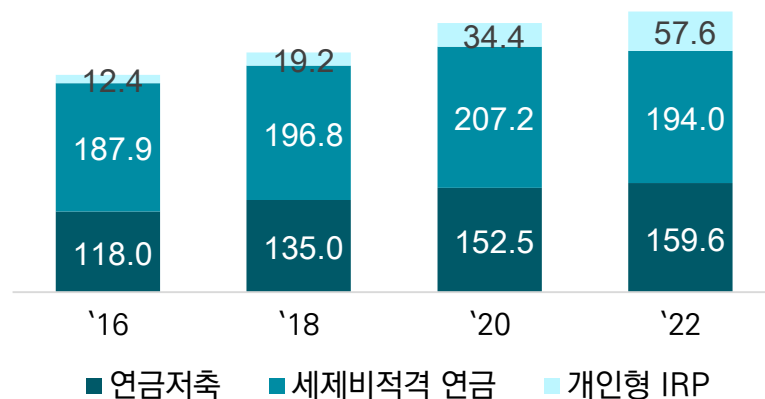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통합연금포털

사적연금 유형별 적립금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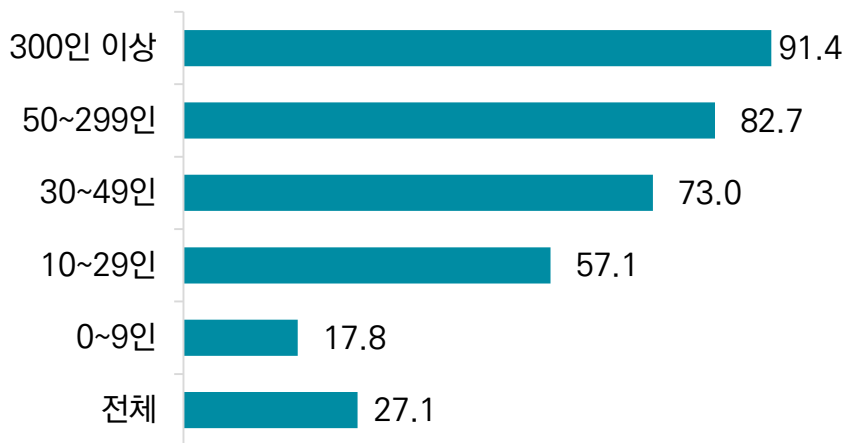
주: 퇴직연금 중 DB, DC, 기업형 IRP는 제외함
자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3-1. 사적연금 활용도

- 사적연금 제도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의 전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여는 미흡
 - 사적연금의 경우 특정계층(고소득,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낮음
 - 향후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시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로 사적연금 가입여력이 줄어들 가능성 존재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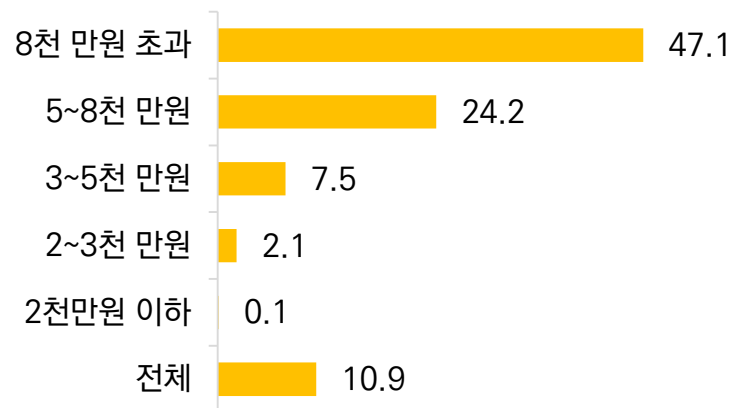
(단위: %)



주: 2021년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2022)

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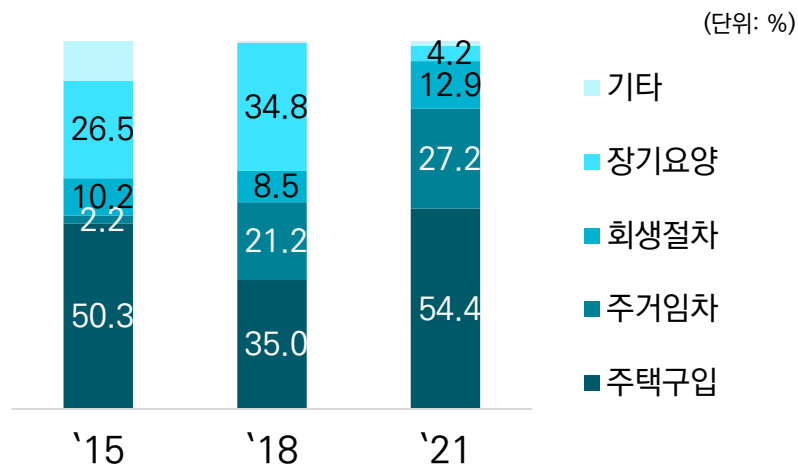


주: 2021년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2022)

3-2. 노후자산 축적: (1) 중도인출과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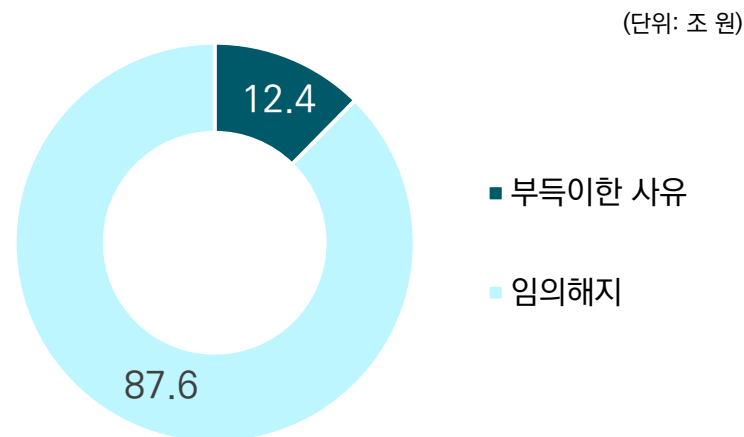
-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이직에 따른 해지는 연금재원 소진으로 이어짐
 - 주택구입(54.4%), 주거임차(27.7%) 등을 이유로 중도인출이 빈번
 - 근로자의 이직 과정에서 IRP로 이관된 퇴직연금 대부분이 해지됨
- (연금저축)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요양 등)로 인한 해지는 12.4%에 불과
 - 연금저축 해지자의 87.6%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로 임의해지함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현황 (유형)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의 해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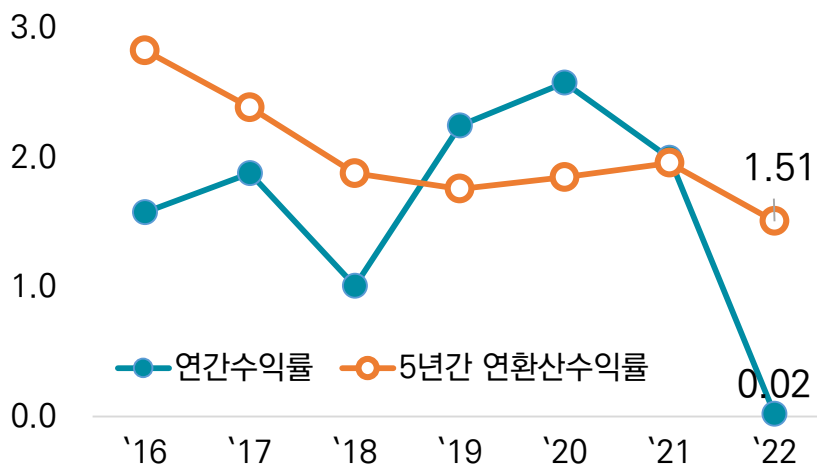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3-3. 노후자산 축적: (2) 수익률

- (퇴직연금) 저조한 수익률은 노후자산 재원 부족으로 이어짐
 - 낮은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자산운용,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 미흡 등에 기인
- (개인연금) 기간별로 외부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으며, 상품특성에 따라서도 차이 존재
 - 펀드, 보험, 신탁 등 투자상품 특성에 따라 수익률 격차는 크게 나타남

퇴직연금의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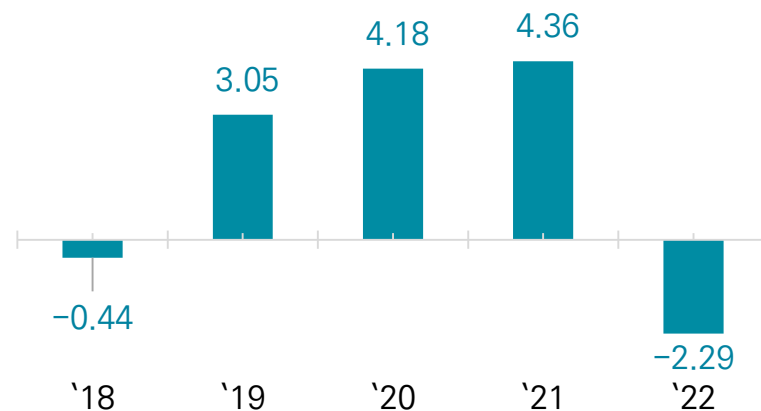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연간수익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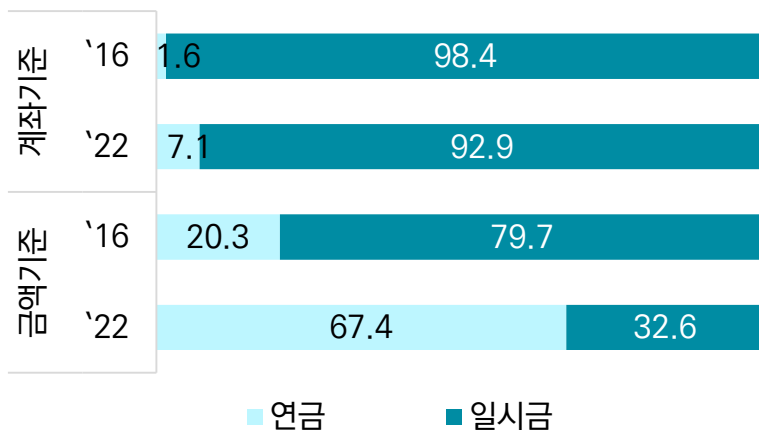
주: 보험, 신탁, 펀드 등 연금저축 전체상품 수익률임
자료: 금융감독원

3-4. 연금수급자의 선택

-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만 55세 이상) 중 연금형태 수령은 계좌기준으로는 7.1%임
 - 수급시점에 적립금 규모가 낮아 일시금 선택 유인이 크지 않음
- 연금저축의 수령형태는 확정기간이 57.9%, 종신형이 38.2%를 차지
 - 확정기간형 중 10년 미만 수령자 비중은 86.0%를 차지

퇴직연금의 수령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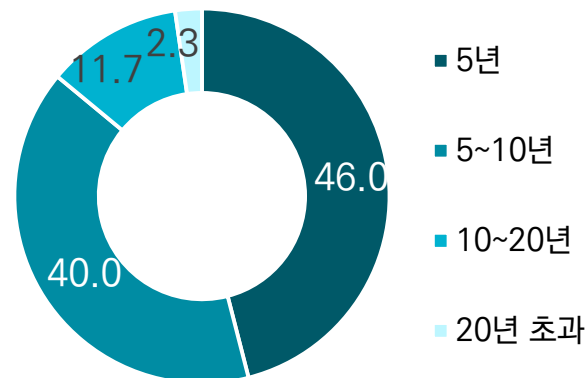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상품의 수령기간 분포

(단위: %)



주: 확정기간형 대상
자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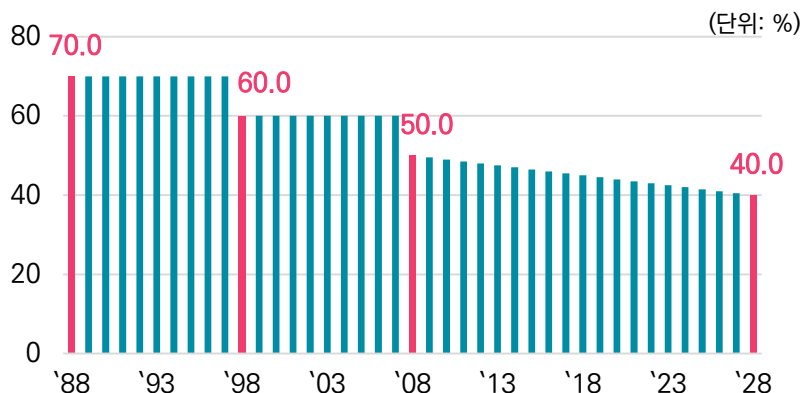
주요 과제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1. 공·사연금 연계 방향성
2.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
3. 자산형성 지원
4. 급여 지급방식 및 연금상품 다양화
5. 연금상품 가입지원

1. 공사연금 연계 방향성

- **적정 노후소득 수준 달성을 위해 공사역할 분담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수적임**
 - 재정문제 및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
-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 방안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60~70%)* 달성을 위한 사적연금의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 * 공적연금의 실질 가입기간을 고려해 볼 때,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0%에 도달하지 못함
 - ‘포괄적 연금통계’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공사연금 가입실태 평가 및 정책 마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과정



주: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할 때의 소득대체율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포괄적 연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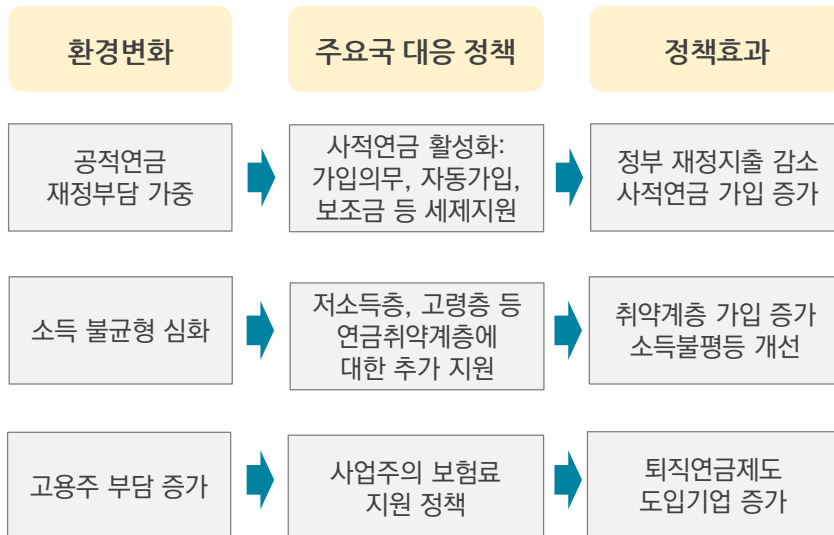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

2.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 (1) 재정지원

- 세제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 필요
 - 저소득계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보조금 제도 검토(독일, 호주, 영국 사례)
 -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책 검토
 - 세액공제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재납입되도록 하는 제도 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방향



은퇴저축에 대한 보조금 정책 운영 실태

• Matching 기여 (고용주)

: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등

• Matching 기여 (정부)

: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미국 등

• 정액 보조금 (정부)

: 칠레, 독일,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등

자료: OECD (2022)

2.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 (2) 자동가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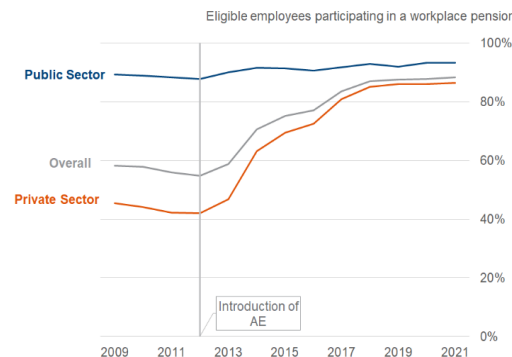
-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자동가입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가입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연금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탈퇴하도록 하는 방식은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Nudge

• 자동가입

- 자동가입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연금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개인은 연금탈퇴서를 작성(Opt-out)
- 사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 * 뉴질랜드 Kiwisaver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 시 가입장려금(kick start payment)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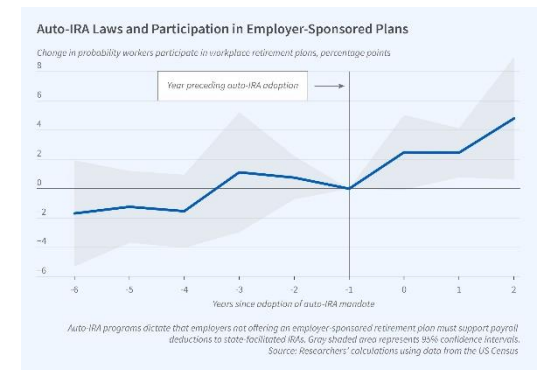
정책효과: 영국, NEST



자료: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22)

- 영국, 2012년 자동가입(Auto-Enrollment) 제도 도입 후 민간부문의 직장연금 가입률은 44%(`12년) 에서 88%(`21년)로 증가

정책효과: 미국, IRA



자료: Bloomfield et al. (2023)

- 미국, 자동가입 개인퇴직계좌(IRA)제도 평가
 - 주에서 운영하는 자동가입 은퇴저축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제도 참여 확률을 높임

3. 자산형성 지원: (1) 중도인출·계약유지·유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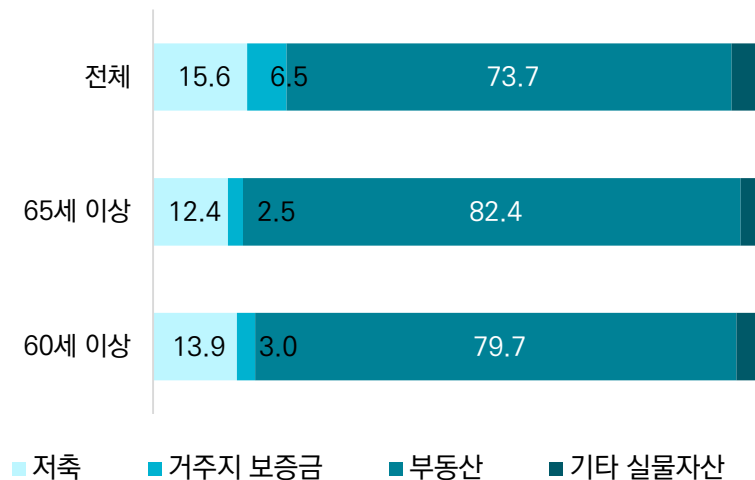
- (중도인출) 연금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도인출제도 개선 검토
 - 중도인출 금액 한도에 관한 세부적 기준 마련 및 담보대출을 통한 일시적 자금수요 활용
- (해지억제)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검토
- (자산유동화) 고령층 가구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도인출 규제 (허용범위)

미국	• 사망(유산인출),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 *주택 구입: 개인퇴직계좌에서만 가능
영국	• 건강 상 이유로 인한 퇴직 • 기대여명 1년 이하
호주	• 영구 및 일시적 장애 • 심각한 재무적 곤경 발생 시

자료: IRS, Australian Taxation Office, GOV.UK

가계의 자산 구성



자료: 한국은행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3. 자산형성 지원: (2) 수익률

-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자 간 비교 공시 확대
- 소비자들의 연금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담 합리화
 - OECD 주요국은 경매방식, 퇴직연금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퇴직연금 운영비용을 절감
 -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회사 간 비경쟁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수수료 운영체계

• 정보공시

: 사업자 간 수익률 비교정보 제공

• 수수료 규제

: 기여금, 연금자산, 운용성과 등에 수수료 상한 설정

• 운영구조 개선

① 경매방식을 통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칠레, 뉴질랜드 등

② 퇴직연금 전담기관 설립

: 영국 NEST, 스웨덴 PPM 등

일본, 단체연금 공동관리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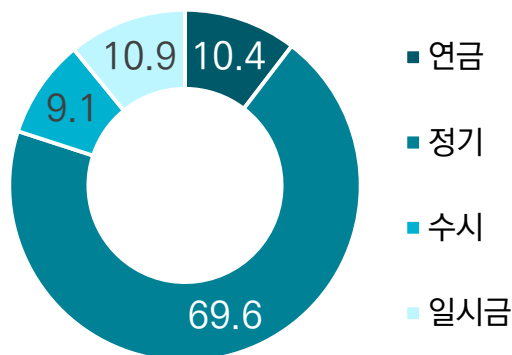
4. 급여지급 방식 및 연금상품 다양화

- 급여지급 단계에서 안정적 소득흐름 발생을 위해 연금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연금가입자가 급여수령 단계에서 연금형태로 자동적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정책 검토
 -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
 -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비율 축소 등을 검토

주요국 연금화 유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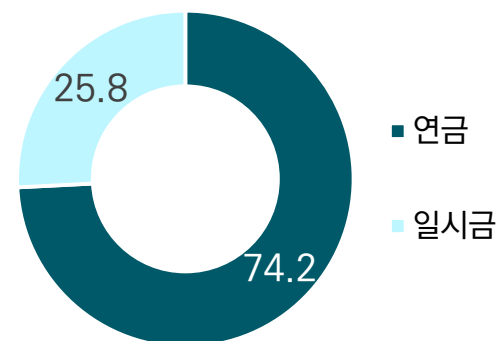
- 연금과 일시금 소득세율 차등화
: 영국, 스위스, 미국
- 연금수령 의무화
: 네덜란드
- Opt-out 제도 (원칙적 연금수령)
: 스위스

영국: 퇴직급여 수령방식



주: 2020년 기준임
자료: FCA

스위스: 퇴직급여 수령방식



주: 2020년 기준임
자료: FSIO

5. 가입 지원: Communication, 판매자의 역할

- 정부와 연금사업자는 개인의 연금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
 - 개인의 연금지식이 적극적인 연금상품 가입 및 운영 관련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사적연금 가입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적합한 상품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일본의 경우 민영 노후소득 보장상품 가입 과정에서 공적연금 수령액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

Pension Communication: 연금정보 제공

중요성 (등장 배경)

- 연금제도 혜택의 관대성 감소
- 노후소득개인의 자발적 책임 강조
- 금융의사결정 시 선택의 어려움

사례

- 네덜란드: Uniform Pension Overview
- 덴마크: Pensionsinfo.dk
- 이탈리아: *'la mia pensione'*
- 스웨덴: Orange Envelope

사적연금 판매 시 공적연금에 대한 정보 제공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의 취지를 감안해, 보험모집인 등이 공적보험제도에 대해 적절히 이해를 한 후, 고객에게 공적보험제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및 그에 따른 보장의 필요성을 이해한 후 그 의향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감사합니다.